

한라 포커스 버스준공영제 개선 '빨간불'

시스템 개편 용역 '스톱' ... 진통 계속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 용역 지난 10월 이례적 중단
보조금 비율 하향·노선 감축 등 개편안에 업체 반발
용역 내용·제주도 용역 관리에 '부실' 비판 잇따라

제주 버스 준공영제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추진했던 용역이 지난 10월 초 멈춰선 이래로 여전히 중단 상태에 머물러 있다. 용역 결과물 자체도 만족스럽지 않은 데다, 노선 감축·통폐합 등 개편안을 두고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당장 내년부터 실행하기로 했던 단계별 개선 계획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업체 반발·공청회 파행... 이례적 용역 중단= '제주 버스 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이하 준공영제 용역 또는 용역)은 연간 1000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됨에도 이용자 수는 늘어나지 않는 등 비효율적인 운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작했다. (주)인트랜,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주)스튜디오 갈릴레이에 의뢰해 지난해 11월부터 용역을 진행했다.

올해 9월 용역 결과물이 나왔다. 용역진은 중복률이 70%가 넘는 노선을 통폐합해 공차 운행을 줄이고, 대체 노선 10개 이상 또는 환승 통행량 10% 이하의 경우 운행 횟수를 줄인다는 안을 제시했다. 버스요금 인상안 등을 토대로 운수업체에 대한 보조금을 현재 대비 약 22% 줄이겠다는 안도 내놨다.

그러나 용역 완료로 코앞에 두고 용역이 일시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노선 개편안에 대해 운수업체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은 물론, 제주도가 용역 결과물을 공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청회를 무리하

게 추진하는 등 의견 수렴에 소홀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본보 10월 11일자 3면 보도)

중단된 용역 절차는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개편안에 제시된 감차 및 배차간격 조정 등의 문제를 두고 진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올해 내 실행계획을 수립한 뒤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노선을 개선하겠다는 당초 계획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용역도, 용역 관리도 '부실'= 지난 10월 용역이 중단된 데 대해 제주도는 도민공청회 횡수를 늘리는 등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친 후 용역을 재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용역 결과물 자체가 허술했다는 비판이 연이어 제기됐다. 감축 및 통폐합 대상으로 제시된 노선에 대한 근거와 대체 방안 등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지 못했고, 노선과 보조금 비율 등을 조정할 경우 인력 감축 규모와 대안 등을 명확하게 내놓지 못했다는 등의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제주도가 도내 대중교통체계를 안정화하기 위한 첫 단추인 용역을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예정된 시기에 용역을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은 물론, 제대로된 용역 결과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개편안을 공개한 이후에야 용역진의 개편안이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후 논란이 이어지자 황급



설국(雪國)으로 변한 한라산 1100고지 28일 한라산 1100고지를 찾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설경대를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추억을 새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히 용역 절차를 중단하기로 협의한 것이다.

제주도는 개편안 수정을 마치고 내부 절차가 끝나는 대로 주민설명회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 결과에 따라 '버스 준공영제 개선 실행 계획 수립 및 단계적 노선 개선' 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실행해 나

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제주자치도는 내년 9월쯤 '15분 도시 제주 실현을 위한 대중교통 연계 방안' 용역을 추진한다. 15분 도시 정책과 연계한 준공영제 추진 방향을 정립하고, 자율주행 등 새 대중교통서비스 모델과의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을 발굴할 예정이다. 강다혜기자

제주형 미래인재 양성 국비 300억 확보 도·제주대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총 2145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대학교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이하 'RIS사업')의 내년도 사업비로 국비 300억 원을 최종 확보했다고 28일 밝혔다.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는 연간 429억(국비 300억·도비 129억)씩 5년간 총 2145억을 투입할 계획이다.

RIS사업은 지자체와 대학 뿐 아니라 다양한 지역혁신기관들이 협업 과제를 수행함으로써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취·창업을 통해 지역인재가 지역에 남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플랫폼 구축 또는 지역 내 대학들 간 핵심분야를 연계해 교육체계를 개편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민선 8기 공약과 각종 계획, 도내 대학의 교육여건, 산업 분석 등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핵심과제를 새로 도출해낼 계획이다. 또 제주대학교를 비롯한 도내 대학, 기관, 기업 등 지역혁신기관들과 협력과 공유를 바탕으로 사업과제를 도출하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RIS사업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사업으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밑그림이 될 것"이라며 "사업이 단계적으로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미래비전 실현 지속가능발전 조례 개정 도, 전부 추진... 기본전략 수립 방법·절차 담아

제주특별자치도가 경제·사회·환경 등 도정 정책 전반에 지속가능한 미래 발전의 가치를 담기 위해 '제주 미래비전 실현을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2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이번 전부 개정에는 세부적으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0년단위)의 수립 방법 및 절차가 담길 예정이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5년 단위) 수립·변경 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2년마다 점검해 그 결과를 토대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운영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

영향을 미치는 조례 제·개정 및 행정계획 수립·변경에 대한 검토 등 지속가능발전이 체계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 기구를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이 밖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거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연구센터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조례안은 이날 말 공포된다.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수립될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미래 제주 20년 설계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기자

제주 코로나19 신규	622
잠정집계 28일	누적 36만4537
*17시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2022 지역노사민정 협력 최우수 자치단체 선정

2021년, 2022년 2년 연속 우수 지역 선정

모두가 일하기 좋은 곳,
노동이 존중받는 지역사회, 도민이 빛나는 제주
노·사·민·정이 함께 만들어 갑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민간위탁
운영 기관

제주경제자총협회
JEA
JEONJUNG
FEDERATION

Tel. 064-751-2206 / Fax. 064-751-2208 / jejunosa.or.kr

지방보조금 지원사업